

- 2025년도 -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
(기 획 관)



목 차



I. 기본현황	1
II.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3
III. 2025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9
IV. 정책목표 및 전략	11
V. 2025년 주요업무계획	13
1. 미래 발전전략 기획을 통한 정책 총괄기능 강화	14
2.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15
3.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인구활력 제고	16
4. 체계적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권익 증진	17
5.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으로 민관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18
6.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협력 추진 강화	19
VI. 당면 현안	21

I. 기본현황

□ 기구 및 조직도 ▸ 5 담당관 1 추진단 20 팀



□ 정원 및 현원

(‘25.1월 기준)

구 분	합 계	기 획 담 당 관	조 직 담 당 관	인구정책 담 당 관	법 무 담 당 관	빅 데 이 터 통 계 담 당 관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정 원	120	32	28	11	23	21	5
현 원	126	32	28	13	24	24	5
과부족	6	-	-	2	1	3	-

□ 2025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기 획 담 당 관	조 직 담 당 관	인구정책 담 당 관	법 무 담 당 관	빅 데 이 터 통 계 담 당 관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세 입	2,867	105	-	2,551	3	8	200
세 출	33,257	14,472	573	5,953	1,784	10,175	300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명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종합 기획·조정 ◆ 시정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 건의, 당정협의, 국정감사 총괄 ◆ 정책문제 분석, 대응방향 제시 및 주요정책 프로세스 관리 ◆ 부산연구원 지도·감독 ◆ 광역협의체,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사항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 시의회 의사운영 지원 및 의정활동 자료 등 관리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 사항 ◆ 시장 공약 및 시정 주요사업 관리, 지시사항 처리 총괄 ◆ 행정협업 제언제도 및 시정혁신 추진, 조직문화 혁신과제 관리, 업무협약 관리 ◆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총괄 ◆ 규제혁신 과제발굴·개선·평가 총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시책의 종합 추진·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인구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기획·조정·총괄,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다문화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및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심사 및 공포·발령 ◆ 구·군 자치입법 및 의원 발의 입법 지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사건 처리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적 추진·조정
빅데이터통계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활용 기획·조정·평가, 데이터산업 육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인프라 구축·운영 ◆ 데이터 분석·컨설팅 실시, 공무원 데이터 교육 운영, 가명정보 활성화 ◆ 국가통계·행정통계 작성·제공, 통계 수요 및 품질관리, 통계행정 조정·관리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 경제동맹 주요 정책 기획·조정 및 시책 발굴 ◆ 부울경 정책협의회, 초광역 경제동맹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부울경 협력사업 및 국비 총괄 대응 ◆ 초광역 경제동맹 대외협력 및 대시민 홍보, 정책포럼 운영

II. 2024년 주요 업무 성과

1.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혁신역량 극대화 및 균형발전 이티서니브 확보

- (글로벌허브도시 도약) 시민 공감대 바탕 「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및 다양한 지원과 특례가 보장되는 글로벌 경제거점·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 견인
 -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 공동발의('24.5.), 중앙부처 협의 완료('24.8.),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상정('24.9.),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24.12.)
 -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60만명 참여
- (시정혁신·시민체감 확산) 부산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시정혁신 선도플랫폼 '부산미래혁신회의' 지속 운영(20회, '22.7.~) 및 생활 속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행복부산회의' 신설·운영(5회, '24.9.~)
 -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7.11.), 글로벌 혁신 창업 플랫폼 조성 전략(8.1.), 이기대예술공원 명소화 방안(10.31.) 등 전문가와 미래전략 논의
 - 생활체육 천국도시(9.25.), HAHA 365 프로젝트(10.11.),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11.12.),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11.19.), 당신처럼 애지중지(12.4.) 등 시민 소통·공감 행정 추진
- (지방시대 실현 기반 마련)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4.2.), 지방시대위원회 분권·균형발전 정책(기회발전특구 등) 심의(6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24.10.), 대통령 지역공약 점검(5회), 자치역량 진단·로드맵 수립('24.12.)
- (광역협력 강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시('24.)로서, 지방분권 촉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공동 대응과 선도정책 발굴·추진
 - 총회 개최(부산 등 3회),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최초), 중앙지방협력회의(3회),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최초),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24.10.), 대한민국 지역대포럼('24.11.)

□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초당적 협치 강화) 핵심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 등 부산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치체계 운영, 시의회와 경계 없는 협력으로 상생발전 도모
 - 2025년 국비 확보와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등 개최(7회)

2.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및 인력 운영

- (성과창출 기반) 민선8기 역점 추진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구 개편 실시
 - 부산 미래 설계 기반 마련(푸른도시국, 미래디자인본부, 반도체신소재과 신설 등)
 - 글로벌허브도시 실현 기반 강화(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 신공항사업지원단,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등)
- (시민·현장 중심) 시민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행정분야 기능 강화
 -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원스톱기업지원단, 민간주택공급팀, 빈집정비팀, 돌봄복지팀 신설 등)
 - 시민행복 중심 기능 강화(생활체육과, 공원여가정책과, 클래식부산, 시민행복지원팀 신설 등)
- (기능·인력 재배치) 기능 쇠퇴·감소 분야 진단, 주요사업 중심 기능인력 재배치(155명)

□ 공약·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및 시정혁신을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

- (공약·주요사업 관리) 공약·시정 주요사업 관리 강화 통한 성과창출 및 이행률 제고
 - 행부 주재 공약추진단 회의(1회), 시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1회), 시민배심원단 운영(1회), 직무 워크숍(1회)
 - 시정 주요사업 선정(세부사업 161개) 및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평가(3회)
- (조직문화 개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시정경쟁력 제고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4월), 협업 우수과제(5개) 시상, 시민·공무원 우수제안(5건/6건) 채택
- (시정혁신 추진) 창의적·능동적 혁신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등 성과공유·확산
 - 시정혁신과제 발굴·추진(225개) 및 정부 혁신박람회 참여(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전략적 성과관리로 실질적 시정성과 창출

- (성과관리) 관리자 중심의 책임있는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 팀장참여 지표컨설팅(4월), 시정주요사업 중심 성과관리(5급이상 1,052명, 지표 2,629개)
 - 실적 모니터링(7월, 12월), 지표품질평가(10월), 부서역량평가(12월) 등 성과평가 객관성 제고
- (지자체 합동평가) 합동평가 효율적 대비로 우수성과 달성 및 시정경쟁력 강화
 - 2023년 평가결과 ▷정량지표 90.2% 달성, 정성평가 6건 선정, 특별교부세 7.6억원
 - 2024년 지표관리 ▷정량지표 실적관리(매월), 담당자교육(9월),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10월)

□ 지역주도 규제혁신 추진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 (규제혁신) 지역 맞춤형 중앙규제 발굴·건의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중앙규제 정기 및 테마(건설, 토지이용) 과제발굴 82건, 중점과제 선정 63건(수용 11건)
 -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준조세 과제발굴 34건, 중점과제 선정 9건(수용 5건)
-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원 신설·강화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28명)·인센티브(승급·성과급·실적가점 등) 지급, 모범 실패사례 신설
 -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456명, 578점 적립), 구·군 규제혁신 평가(3월), 우수사례 경진대회(9월)

《주요성과》

- 「2024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광역 1위 선정(24.7. 대통령상)
-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1(행정안전부장관상), 장려 2(인사혁신처장상) 수상(24.11.)

3.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 인구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총력 대응

- (총괄·조정기능 강화) 인구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선제 대응
 -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24.2.)
 - 인구변화 대응전략 수립('24.9.) ▷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60개 과제 추진
 - 인구변화대응TF 구성·운영('24.下) ▷ ^{단장} 행정부시장, 주요 전략 점검 및 통합 인구정책 발굴
- (지방소멸 집중대응) '22~'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754억원) 효율적 추진 및 '25년 투자계획 컨설팅('24.4.~6.) 등을 통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273억원)
- (추진 기반 강화) 인구변화 대응 연구 강화 및 인구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 역할 및 기능 확대 추진('24.下)
 - 인구정책 재구조화 추진('24.下) 및 인구영향평가 개선 방안 마련('24.下)

□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강화 및 정주여건 마련

-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운영)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을 위한 센터 운영(3개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24.5., 4억원), 부산글로벌센터(3.3억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5.6억원)
- (부산세계시민축제)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및 부산시민 글로벌 축제 개최
 - 제19회 부산세계시민축제 개최(5.18. 영화의전당, 40개국 76개 단체, 1만5천여명 참석)
-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전환 추천(24명) 등 고용허가제·외국인력 관련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찾아가는 근로관계 전문상담(481건) 및 한국어 교육 지원(5,058명), 안전보건교육 통역 지원(175명)
- (민관협력 및 의견수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1회), 외국인대표자회의(2회) 운영

□ 다문화가정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지원기관 운영) 다문화가족 전 생애를 포괄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공통) 프로그램(4개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16개소) 운영 지원
 -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2060명),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다문화 이해강사 12명, 이중언어강사 17명 교육)
-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및 정책 참여 활성화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2회), 결혼이민자대표회의 개최(2회)
- (정책기반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다문화·외국인자녀 교육현장 간담회('24.5.), 2024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24.12.)
 - 무료 종합건강검진(95명), 방문학습지 지원(167명), 국제특송腸외화송금 수수료 할인(815건)

4. 시민중심의 법무지원 및 법률복지 증진

□ 신뢰받는 법무지원으로 시정발전 지원

-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조례·규칙 지속 정비
 - 조례규칙심의회(21회) 개최를 통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342건 심의·의결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전환을 위한 조례 일괄정비 23건
- (의원입법 지원) 의원입법에 관한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 입법재정담당관, 관련부서와 의원입법안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 지원 295회
- (법률지원 강화) 법적 쟁점이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
 - 시정 주요사업 추진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지원(157건)
 - 업무협약서·고시문서 등 중요문서 심사(333건)를 통한 법적 리스크 사전 관리
- (법제역량 제고) 법무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제교육 실시
 - 법제처 협업을 통한 시청·시의회·구·군 직원 대상 법제교육 연 2회(93명)
- (시민권익 보호) 의무부과·권리제한 행정처분 관련 청문 운영(183건)
 -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철저한 법리검토로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신속재결) 신속한 재결로 행정심판 구제기능 강화 ▷ 법정기간 준수율(94%)
- (사건처리) 행정심판(11회, 303건) 및 소청심사(4회, 10건) 청구사건 처리
- (납세자보호) 납세자 숨은불편 발굴, 선제적 권리보호 추진 ▷ 247백만원 환급(부과취소)

□ 적극적 소송수행 및 소송요인 최소화

- (소송수행) 소송수행 397건^(민사 300·행정 97) ▷ 종결 125건(승소율 88.8%), 계류중 272건
- (법률상담) 소송요인 최소화 위한 내부변호사 법률상담 및 지원 362건

《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 (기간/장소) 연중, 무료법률상담실(시청 1층) / (대상) 법률 상담 필요한 모든 부산시민
- ('24 운영성과) 변호사 28명, 민사·형사·가사 등 1,110건 상담(만족도 97%)

(단위 : 건)

합계	민사	형사	가사	기타
1,110 (100%)	508 (46%)	66 (6%)	243 (22%)	293 (26%)

5.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 데이터·인재·산업이 융합하는 자생적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
 -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6개월) ▷ '25.~'27.(3개년)
 - 빅데이터혁신센터 운영 및 지산학 데이터 협력거버넌스 구축 ▷ 기업육성·인재양성
-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인재양성) 기업 문제 해결 및 전문인재 양성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5억원, 20개사), 데이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1.7억원, 22개사)
 - 지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추진(3억원),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5억원) ▷ 취업연계 등

□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도시 기반 조성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Big-데이터웨이브' 포털 서비스('24.8.)
 - 통합저장소, 표준·품질, 분석·시각화, 실증 서비스(시민관심도, 수산물 유통모니터링) 등
- (데이터 발굴·개방) 대시민 수요 조사,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166종 322건), 인구소멸, 상권분석 등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7종)

□ 데이터 분석과 가명정보 활성화를 통한 시정과제 해결 및 행정역량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맞춤형 데이터 분석·컨설팅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데이터 분석(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잠재 수요 분석 등 3건), 컨설팅(분석·데이터 지원 50건)
 - 가명정보 활성화(컨설팅 34건, 적정성 검토 10건, 가명처리 지원 등 11건, 교육·홍보 24회)
- (데이터 활용 교육) 데이터 기반 행정 실무 적용을 위한 체계적 교육 운영
 - 인재양성 교육(3개 과정 43회 847명), 데이터 특강(2회 321명), 경진대회(21개팀 참여)

□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 (고품질 통계 지속 생산·제공) 경제·사회상 반영한 통계 제공으로 정책 지원(22종)
- (통계 홈페이지 개편) 부산의 100대지표 추가 등 이용자 친화적 비대면 서비스 강화
- (통계행정 관리체계 확립) 시행계획 수립 업무편람 작성 통계분야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

《주요성과》

- 「2020~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행안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특교세 '22~'23년 0.9억원(24.2)
- 「2023년 행안부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데이터기반행정)」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24.7.)
-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장노년 통계 개발 및 해양산업조사 개선)」 통계청 우수기관 선정('24.11.)

6.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견인

□ 상시적·포괄적 초광역 협력 시스템 운영

- 전국 최초, 초광역권 지원 조례 본격 시행('24.1.1), 협력강화와 상생발전 지원
-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부울경 시도지사 공동의장)
 - 연 2회(상/하반기) 정례회 운영
 - 제2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24.3.11.), 핵심 프로젝트(3대 분야 14개 사업) 공동발표

《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공동발표 》

- (일시/장소) '24. 3. 11.(월) 16:00~17:00 / 울산광역시청(2층 대회의실)
- (참 석) 부울경 시도지사, 정책 보좌관, 안건 소관 실국장 등 20여명
- (주요내용)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주요 협력사업) 심의 및 공동 발표

- '부울경정책협의회 산하 조정회의' 운영(부울경 기획조정실장 공동의장)
 - 1분기 조정회의('24.2.2.) : '24년 업무계획,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공동발표안 등
 - 2분기 조정회의('24.6.26.) : 국비대응단 운영, 시도민 체감형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협의
 - 3분기 조정회의('24.9.25.) :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경제동맹 정책포럼 개최 협의
-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소관 부서장)
 - 초광역 협력과제 실무부서의 상시적 논의체계 및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대분과(인프라/신성장/생활여건) 회의 2회 개최('24.5.8/9.12.), 소분과 회의 수시 개최

□ 초광역 협력 강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기반 마련

- 「20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3개 시도 공동 수립), 정부 종합계획 반영
 - 5개년('23.~'27.) 종합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한 '24년도 시행계획 수립('24.4.4.)

《 2024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

- (수립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수립주체) 부산, 울산, 경남(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공동 수립, 공동 제출)
- (연구기관)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현안 연구과제로 참여
- (주요내용) '24년 성과목표·성과지표, 추진전략 및 방향
- * 추진과제 :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57개 실천과제(총 1조 544억원)

- 부울경 협력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부울경 국비대응단 운영
 - '25년 부울경 협력사업 17개, 3,511억원 국비 반영('24년 17개, 3,422억원 반영)
 - 기재부 등 국회 공동 방문(2회),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등 대응

Ⅲ. 2025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대내외 정책여건

- ◇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 제약,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 및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초래
- ◇ 부산지역 총인구는 199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330만 명 선 붕괴(‘23.), 현재 327만명(‘24.12 기준), 특·광역시 중 유일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1. 정책환경 진단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국가 간 분쟁,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안 요인 심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종합주가지수 하락 흐름세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세 지속 등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양상
-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 첨단산업으로 성장세를 견인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성장률 격차를 보이며 성장잠재력 지속 약화, 자본·기업·인재의 수도권 이탈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 수도권의 과도한 밀집·경쟁이 유발한 인구감소 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의 역할 및 위상 확립 필요성 대두
- **[인구위기]** 유래 없는 초저출생 지속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24.6.), 지방은 청년인구 중심의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으로 소멸 위기 증대
 - 정부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외국인·이민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으로 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필요성 고조]**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전략 자산으로서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 도입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 도모

2. 대응방향(기조)

- **[미래비전 실현 · 시정역량 강화]**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도권 집중화, 인구감소, 정치 갈등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정 혁신 역량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시정 핵심 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허브도시로서 역량 강화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에 박차
- **[남부권 거점도시로 도약]** 부산을 세계적 수준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고,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한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
 - 부산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를 적용, 물류, 금융, 신산업, 관광, 교육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여 남부권 거점 역할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 및 광역협력과 중앙정부·국회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
-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청년유출 완화와 생활인구·외국인주민 확대 위해 지역주도의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정책간 시너지 효과 모색
 -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부 기조 반영 실효성 제고, 외국인 유입 전략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각종 인구정책의 상호 연계·융합 추진
- **[데이터기반행정 혁신방안 마련]** 데이터 활용과 협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등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디지털 중심의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데이터 인재 양성 등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생태계 조성

IV. 정책목표 및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목 표

시정혁신 선도로 글로벌허브도시 · 시민행복도시 실현

추진 전략

- ❖ 남부권 거점도시 도약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 견인
- ❖ 시민 공감·시민 중심 소통행정 구현으로 힘이 되는 시정실현
- ❖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광역협력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중점 추진 과제

미래 발전전략 기획을 통한
정책 총괄기능 강화

- ① 시정 종합 기획 및 현안 대응체계 강화
- ② 협치 및 상생협력 네트워크 지속 가동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시 정 성 과 창 출

- ① 효율적 조직관리로 시정비전 성과창출 기반 마련
- ② 공약·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및 시정경쟁력 제고
- ③ 시정비전 반영 성과관리로 시정발전 견인
- ④ 지역현안 맞춤 규제해소 및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시 민 이 공 감 하 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인 구 활 력 제 고

- 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
- ②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강화 및 정주환경 조성
- ③ 다문화가정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 존중 인식 확산

체계적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권익 증진

- 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및 시민중심 법제 추진
-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③ 적극적 소송수행 및 소송요인 최소화

데 이 터 기 반 행 정
혁신으로 민 관 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 ①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선도
- ②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데이터 허브 구축
- ③ 데이터 분석 기반 시정 과제 해결 및 행정역량 강화
- ④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협력 추진 강화

- 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전담축 역할 수행
- ②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3년차, 시도민 체감 성과 창출

V

2025년 주요업무계획

1. 미래 발전전략 기획을 통한 정책 총괄기능 강화
2.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3.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인구활력 제고
4. 체계적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권익 증진
5.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으로 민관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6.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협력 추진 강화

1

미래 발전전략 기획을 통한 정책 총괄기능 강화

- ❖ 글로벌허브도시·시민행복도시로 도약을 위한 도시 미래 발전전략 제시
- ❖ 지역현안 해결 및 미래비전 완성을 위한 전방위적 협치체계 구축·운영

□ 시정 종합 기획 및 현안 대응체계 강화

- (시정기획·조정 기능강화)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과 미래비전 구상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핵심 현안 추진력 제고 등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시정 현안 조정·대응) 시정 핵심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안 대응 로드맵 수립 및 시정 현안 집중관리
 - ▷ 명확한 목표 설정·신속한 의사결정·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핵심현안 신속대응 TF’ 운영
 - (정책체감도 제고) 민선8기 시정비전·방향 구체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시정성과의 체계적 관리·확산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 ▷ 시정혁신 선도플랫폼 ‘부산미래혁신회의’, 생활 속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행복부산회의’ 운영
- (지방시대 선도도시 입지 강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양대 성장 허브로 구축
 - (지방시대 실현 실행력 제고) 지방시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지방시대 위원회 운영 활성화,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사업 간 연계·협업 방안 마련
 - (광역권 협력 강화)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혁신적인 광역협력 강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도모
 - ▷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영호남·영남권 등 광역협의체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 해결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본격 추진)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마련 및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절차 추진, 글로벌허브도시 정책 실행을 위한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등의 거점기반 조성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협치 및 상생협력 네트워크 지속 가동

- (초당적 협치) 국회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협치 기반의 시정 운영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치 체계 지속 강화
 - (당정협의)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등 국회와 협력 강화(’24년 7회 개최), 2026년 국비 확보와 연계한 중앙부처와의 소통 적극 추진

-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조직 구현, 공약·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 ❖ 체계적 성과관리로 실질적 성과 창출, 규제혁신·적극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

□ 효율적 조직관리로 시정비전 성과창출 기반 마련

- (조직관리 효율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수시·정기 조직진단 시행
 - 진단 결과에 따라 조정 검토·시행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력 집중
- (유연한 정원운영) 효율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위해 인력 재배치 활성화
 - 기능 쇠퇴·감소 분야 → 시정 현안·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기능·인력 재배치
- (미래 행정수요 예측) 중·장기 행정수요 대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25.11.)

□ 공약·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및 시정경쟁력 제고

- (시정성과 극대화) 공약·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내실화로 시민약속 실천
 - 반기별 목표 대비 추진사항 집중 관리 강화를 통한 공약 조기 이행 및 달성률 제고
 - 상시 모니터링·분기점검, 효율적 실적관리로 가시적 성과창출 실현
- (지시사항 관리) 시장 지시사항 신속 전파 및 효율적 시스템 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
- (조직문화 혁신) 체감 가능한 실천적 조직문화 정착 및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 학습조직 운영, 협업·혁신 우수과제 발굴·확산, 시정혁신 워크숍, 시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 시정비전 반영 성과관리로 시정발전 견인

- (성과관리) 시정 주요정책의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추진력 강화
 - 시정비전 반영 전략목표와 주요사업 성과관리 연계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실현
 - 성과관리 팀장책임제와 부진사업 사유분석을 통한 환류 및 책임성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 대비로 우수성과 달성 및 시정경쟁력 강화
 - 2024년 평가대응, 2025년 지표관리(실적 점검, 담당자 교육, 자체·전문가 컨설팅 등)

□ 지역현안 맞춤형 규제해소 및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 (규제혁신) 지역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및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관리
 - 지역현안 및 시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중앙규제 발굴·건의,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기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관리
- (적극행정) 적극적인 업무수행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책임관 회의, 면책보호관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추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행극복 적극행정 업무수행에 대한 상시적 보상(마일리지 적립)

- ❖ **인구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공감대 확산**
- ❖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다문화융합 도시 구현**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

- **(총괄·조정기능 강화) 인구변화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25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25.上),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5.下)
 - 정책과제 발굴(인구전략연구센터), 협업체계 활성화(인구변화대응TF·인구활력추진단)
- **(지방소멸 집중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통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 투자계획 사전컨설팅('25.) 등 중장기·종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 '22~'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관리·운영(총 64개 사업, 1,027억 규모)
- **(시민 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길라잡이 제작('25.上), 인구위기대응 정책컨퍼런스 개최('25.下)

□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강화 및 정주환경 조성

- **(지역맞춤형 비자정책) 산업·인구구조·지역 특성 등 고려, 우수 외국인력 유입 지원**
 - 체류자격 다양화 등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으로 인구소멸 지역 정착 유도
 -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입 도모
-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지원 및 생활편의 제공**
 - 종합상담(7개 언어), 전문상담(법률·세무 등), 통·번역, 한국어강좌(초중급, TOPIK)
 - 통합콜센터 및 정보제공 플랫폼(Life in Busan) 운영, 공공의료기관 상주통역 지원 등
- **(상호 이해 및 소통 증진) 외국인 정책참여, 인식개선 등 통합사회 기반 마련**
 - 외국인 커뮤니티지원 지원(20여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및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 세계시민축제 20주기 기념행사 개최, 세계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등 운영

□ 다문화가정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 존중 인식 확산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결혼이민자 역량개발**
 - 통·번역 제공(14개소), 한국어 교육(16개소), 학력신장 프로그램(검정고시 대비반) 운영(3개소 내외)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1개소), 무료 종합건강검진(민간협력, 5월)
-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력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
 - 진로설계^(6개소), 기초학습^(11개소), 교육활동비 지원^(16개소), 방문교육·언어발달·이중언어^(각 11개소)
 - 다문화 아빠학교 운영(9월), 다문화자녀 재능개발 장학금 지원(민간협력, 연중)
-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지역주민 간 소통·융합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상·하반기, 2회), 결혼이민자대표회의(상·하반기, 2회), 교류소통공간 운영(3개소)

- ❖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법률적합성 도모, 시 주요현안 대상 법률지원 강화
-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과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시민의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및 시민중심 법제 추진

- (자치법규 정비) 정책·상위법령 변경사항 신속 반영 및 자치법규 적기 정비
 -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내실있는 법제심사로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은 일괄 정비 방식을 통해 신속성·효율성 도모
 -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하여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
- (법무지원) 시정현안에 대한 선제적 법률지원 강화로 법적 분쟁 최소화
 -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적극적 법률자문
 - 법률자문위원 및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의 수시 상담을 통한 신속한 법무지원
- (심사강화·역량제고) 중요문서 심사 강화 및 법제담당 직원 역량 제고
 - 협약·고시 문서 등 중요문서 심사를 통한 행정의 법률적합성 제고
 - 법제처 협업을 통한 시, 구·군 직원 법률교육 실시(반기별 1회)
- (법률복지) 실효성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주2회)으로 시민법률서비스 제공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의 구제 강화

-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정기적 개최 및 재결의 공정·신뢰성 확보
 - 행정심판위원회 연중 정기적 개최 및 법정 재결기간(60일) 준수
 - 건축·건설분야 주요사건 현장확인,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한 심리·재결 신뢰성 제고
- (납세자 보호) 더 가까운, 더 편리한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
 - 납세자 권리 침해분야 선제적 점검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
 - 세무정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중심 소통활동 강화

□ 적극적 소송수행 및 소송요인 최소화

- (소송수행)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 제고
 - 중요소송 관계부서 합동회의, 패소사례 분석 등 적극적 소송대응
- (소송경제성 확보) 판결 외 해결방안 강구 및 책임회피성 상소 지양
 - 조정·화해 등 적극 활용 및 승소 가능성 희박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성 상소 지양
- (중요소송 관리) 시정에 중대 영향을 미치거나 소가 50억원 이상인 소송 특별 관리
 - 중요소송 지정·관리 총 5건, 소가 3,603억원(행정 1, 민사 4)

- ❖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추진 및 인프라 확충으로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과학적 시정 구현 및 통계데이터 정책 기반자료 확충

□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선도

-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5개년(’26.~’30.) 데이터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부산 빅데이터혁신 센터’ 운영
 - 혁신성장 데이터 챌린지 사업(DIVE, 데이터 콘퍼런스), 공공·민간 데이터(오픈랩) 이용 활성화
 - 지산학 데이터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데이터산업 혁신 포럼^{4회} 및 캠프)
- (데이터산업 지원 강화) 데이터산업 실무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5억원, 30개사), 지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추진(24억원)
 -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5억원) ▷ 현직 멘토링, 취업연계 등

□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데이터 허브 구축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Big-데이터웨이브’ 구축완료(’25.3.)·본가동(’25.7.)
 -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 통합지도, 이벤트 등 홍보 추진
- (데이터 개방·관리·확대) 현행화(매월), 표준·메타관리(수시), 개방 확대

□ 데이터 분석 기반 시정 과제 해결 및 행정역량 강화

-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실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시정 현안 해결 지원
 - 소득수준 중심 인구특성 지표 개발, 수요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데이터 활용 인재육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공무원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 공무원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데이터 특강 등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가명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 (고품질 통계 지속 생산·제공) 경제·사회상 반영한 시의성 높은 통계로 정책지원(21종)
 - 5년 주기 대규모 2025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통계행정 관리체계 강화) 통계행정 효율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연간 시행계획 수립, 연간 인력운영 계획 및 안전관리,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 (통계데이터 활용도 증대) 통계 품질 제고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이용자 활용도 증대
 - 이용자 중심의 통계홈페이지 지속 개선, 통계 품질진단 및 만족도 조사

-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전담축 역할 수행으로 부울경 상생발전 전략 마련
- ❖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3년차, 시도민 공감하는 체감형 사업 성과 창출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전담축 역할 수행

- (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와 상생발전 전략 추진
 -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의장, 연 2회(상/하반기) 정례회의 개최
 -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24.上, 경남),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 사업 논의
- (조정회의 개최) 부울경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등 협의·조정
 -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공동의장, 연 4회(분기별) 정례회 및 수시회의 운영
 - '25년 정책협의회(부산/경남/울산 윤번제) 안건 논의, '25년 업무계획 등 논의
- (실무협의회) 초광역협력과제 실무부서의 상시적 논의체계 마련 및 성과 창출
 - 대분과(3분과) : 사업진행 등 관리, 협업 및 의사소통 조율, 반기별 정기회 개최
 - 소분과(16분과) : 간사 시도 선정, 사업내용 협의 추진 등 분과별 자율 운영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자문단 운영) 부울경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소통창구 마련
 - 분야별 전문가 21명(부울경 각 7명),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경제동맹 정책 포럼 개최 및 홍보 강화) 부울경 경제동맹 공감대 확산 및 홍보
 -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25.下, 경남연구원 위탁) 개최(윤번제), 언론 홍보 추진

□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3년차, 시도민 체감 성과 창출

- (체감형 공동협력 사업) 교통·교육·일자리·문화관광 등 4대 테마 주제 사업 발굴
 - 부울경 시도민 함께 누리는 생활 체감형 복지, 안전·환경 사업 발굴
 - 1시간 생활권 구축 및 교육&일자리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 지원 사업 추진 등
-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지속 추진) 3대 분야(신성장 산업, 인프라, 인재육성·관광) 14개 사업 발굴, 부울경 지속 협의 및 정부 건의로 성과 창출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부울경 3개 시도 공동 수립 정부 중합계획에 반영
 - '23~'27년 5개년 중합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한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 (부울경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부울경 공동 협력사업 '26년 국비 확보 공동 대응
 - 기재부 등 중앙부처, 국회 공동 방문,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등 대응

VI

당면 현안

1.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2.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3. 소득수준 중심 인구특성 지표 개발
4.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5.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 거점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 필 요 성

-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직면한 국가 성장 한계 극복 위해 수도권 대응한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의 부산 재도약 절실
- 부산을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 견인

□ 추진방향

-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서, 부산 전역을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
- (특별법 제정)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조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글로벌 허브도시** :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생활 등에서 국제화 기반이 갖추어져 세계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 추진상황

- '23. 下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안) 추진 검토
- '23.12. 범부처(단장: 행안부 차관) 및 부산시 추진체계 구성·운영
- '24. 1. 특별법,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 공동발의(대표발의: 전봉민 의원)
- '24. 1.~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 관계부처 방문, 특별법안 협의 등
- '24. 3. 관계부처 협의 완료(3.11.(월), 부산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 회의 개최)
- '24.5.31. 특별법 재발의,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 공동발의(대표발의: 이현승·전재수 의원)
- '24. 8. 특별법 재발의안 부처 협의 완료
- '24. 9.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상정(전체회의 9.2., 제1소위 9.24.)
- '24.11.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부(160여만명) 국회 전달(11.5.) 및 국회 기자회견(11.27.)

□ 향후계획

- '25. 1.~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국회 심사(입법공청회, 법안심사 등) 대응
- '25. 1.~ 특별법 제정·시행 대비 후속절차 및 종합계획 마련 용역 추진 등

□ 제정취지

- (목적)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정의) “글로벌허브도시”란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기반과 교육·생활·관광·환경 분야에서 국제화 기반이 갖춰진 도시

□ 특별법 주요내용

- (균형발전)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시책 발굴·추진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위원 : 관계부처 장관)하고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및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

- (투자유치)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의 국내외 핵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특구*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특구 내 세금·부담금 감면, 인프라 지원, 신사업 발굴을 위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

- (도시기반)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교육·생활환경 및 문화·관광 환경 조성으로 세계인이 살고 싶은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 구축

① (교육)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대학원 대학 등 첨단산업 기술인재 양성

② (생활) 외국기업·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자유로운 왕래 보장, 외국어 서비스 등 지원

③ (문화·관광) 문화·관광·체육시설 우선 유치, 문화자유구역 지정, 세계적 관광자원 개발 등

- (특례지원)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예외 및 완화 적용,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

① (개발사업) 특구 등의 지역발전특화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② (행정절차) 市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권한 확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③ (인센티브)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의 감면, 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 ❖ 2030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안 마련
- ❖ 시정전반의 데이터기반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계약방법 : 조달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총사업비 : 3.5억원 (시비 100%)

□ 추진상황

- '23. 12. ~ '24. 3 빅데이터 워킹그룹 회의(1~3차, 시·대학·출자출연, 경제단체)
- '24. 4. 「2030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데이터 컨트롤 타워) 데이터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 방안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기획, 정책프로세스 지원, 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구축) 데이터 관리체계, 활용규정, 협의체 운영 등
 - 전문인력 확보, 내부인력 전문성 강화, 외부전문가 협업체계 마련
 -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산하기관 데이터 통합 표준안 마련
- (데이터 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 확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데이터 생태계 육성)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 향후계획

- '25. 1. ~ 2. 추진계획수립, 과업심의위원회, 사전협의 등
- '25. 2. ~ 4. 용역발주 및 사업자 선정
- '25. 4. ~ 12. 용역사업 추진

- ❖ 인구와 경제 활력 정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추진
- ❖ 신용·소득 정보를 통한 객관적 경제 여건 분석 및 관련 정책 지원 강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 「부산 인구변화와 대응전략」 (‘24.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계약방법 : 조달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총사업비 : 1.8억원(시비 100%)
 - 신용·소득 세부 정보 민간 데이터 구매 80,000천원(40,000천원×2회)
 -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용역 100,000천원(20,000천원×5월)
- ※ (기술인력 월평균 임금) 업무분석가 11,128천원, 데이터분석가 7,938천원
- 주요내용
 - (소지역 단위 데이터 수급) 집계성 통계가 아닌 소지역 단위 경제 활동, 소득·소비 수준 등 세부 데이터를 통한 지역경제 관점의 분석 기틀 마련
 - (소득수준 중심 지표 개발) 소비 및 지출 변동성, 지역별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해 시정 정책 수립 시 경제적 근거 도출
 - (지표 정보 주기적 현행화) 지역별 경제 활동 정보를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4. 12. ~ '25. 1. 부산연구원 자문 및 신용·소득 업체 대상 데이터 협의

□ 향후계획

- '25. 1. ~ 2. 추진계획 수립, 인구통계 및 신용·소득정보 활용 체계 확립
- '25. 2. ~ 4. 정보화 용역 사업 과업 심의 및 사전협의, 용역 발주
- '25. 5. ~ 11. 사업자 선정, 분석용 데이터 생성 및 분석, 완료 보고

- ❖ 산재된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통합하여 데이터 전주기 관리
- ❖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치 창출 및 과학적 정책수립

□ 추진근거

-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조례)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공약) 부산시장 공약 사업(4-3-2.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8. ~ '25. 3.(600일 이내)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9.)
 - 장기계속 사업 ▶ (1단계) '23.8.~'24.6. (2단계) '24.6.~'25.3.
- (총사업비) 110.6억원 ('23년 60.2억, '24년 50.4억)
- (사업내용) ^{1단계} 통합저장소, 공유·활용 플랫폼, ^{2단계} 데이터 거래소 등
 - 기운영 데이터 이관·통합 ▶ 공공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등
 - 데이터 저장소 구축 ▶ 원천데이터, 데이터 셋, 융합데이터 등 수집·저장
 -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 기본 셀프분석 및 전문분석 서비스
 - 데이터거래소 ▶ 데이터 거래, 분석, 관리 기능
 - 부산형 데이터 통합지도 구축 ▶ 원스톱 데이터 검색, 소재정보 조회 등
 - 분석실증 사례 개발(5개 과제) ▶ 1단계(2), 2단계(3),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

□ 추진상황

- '22. 3.~12. ISP 수립(9월), 구축계획(10월,시장), 예산편성
- '23. 1.~ 8. 시행계획, 재정투자심사, 사전협의, 계약체결
- '23. 8.~ '24. 6. 1단계 개발 사업(통합저장소, 포털서비스) 추진 및 준공
 - 착수보고회('23.9.5.), 자문회의 및 민·관 협의체 발족식('24.3.5.), 완료보고회('24.7.5.)
- '24. 7.~ 8. 명칭 공모(Big-데이터웨이브)¹⁾, 1단계 서비스 본가동

□ 향후계획

- 2단계 사업완료(~'25.3.), 시험운영('25. 4.~6.), 본가동('25.7.) 및 안정화 추진

1) Big은 부산시 브랜드 슬로건의 Big(Busan is good), 크고 많은, 부산의 고품질 데이터 등 의미, 데이터웨이브는 데이터의 물결이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의 의미,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사회 예측, 문제해결 등 과학적 시정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음.

- ❖ 부울경 시도민이 공감하고 경제동맹의 실질적 성과 가시화를 위한 체감형 협력사업 발굴 확대 필요

□ 발굴개요(2025~2026)

- 발굴분야 : 교통,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복지, 안전 등
 - 부울경 3개 시도 참여가 필수사항은 아니며, 2개 시도 공동사업
 - 2개 시도 우선 추진 후 3개 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제안
 - 부울경 협력 사업(既 추진) 중 시도민 만족도가 큰 사업 등
- 추진절차
 - (既 발굴) 참여시도 사업 부서별 협의 추진
 - (신규발굴) 부울경 실무협의회*를 통한 제안사업 논의 후 계획수립 등 추진
 - * 사업추진 방향, 타당성, 방법, 간사 시도 등 선정
- 사업안 : 4대 분야 12개 사업* *복지, 안전·환경, 교통, 교육·인재

□ 추진상황

- '24. 7. :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발굴 계획 수립
- '24. 10. :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실무협의회 개최

□ 현안 및 대책

- (사업 발굴 애로)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체감형 사업 발굴 어려움
 - ▶ 실무협의회·조정회의 등 실무 핵심인력 간 의사소통과 협업 강화
- (예산 확보 대응) 부울경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 ▶ 부울경 국비대응단 운영으로 기재부·국회 방문 등 공동건의 대응

□ 향후계획

- '25. 1/4분기 : 체감형 사업 선정 및 공동발표(부울경정책협의회 개최시)
- '25. 하반기 : 체감형 협력사업 추진 및 국비(예산) 확보 공동 대응

